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 사찰한 삼성을 규탄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

“반올림은 서초사옥 앞에서 1,000일 넘게 농성했다. 서초사옥 안에는 사찰범죄를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이 있었다. 국정농단 뇌물범죄, 회계사기 범죄, 노조파괴 범죄 전방위적인 사찰 범죄, 그 자체로 범죄집단이었다. 그 책임자가 이재용이다. 반올림 농성장에서 사찰은 비밀이 아니었다. 매시간 농성장 주변에 있던 삼성 경비들은 무선 실시간 보고하는 것도 조심하지 않았다. 반올림 삼성직업병 피해자와 활동가 물론 방문자까지 삼성건물에 출입하는 걸 제한당했다. 농성장에 방문했다가 지하상가에서 딸에게 주려는 케익을 사려던 방문자에게 삼성경비는 이렇게 말했다. ‘아까 천막에 들어가셨잖아요.’라 말했다. 농성장에 들어간 사람은 경비에게 실시간 공유되고 있었다. 반올림 농성장 주변 5-6대 감시카메라가 이런데 활용되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다. 삼성에 맞서 싸워왔던 직업병 피해자들은 사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괴롭힘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다. 딸의 죽음을 알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렸던 황상기 아버님이 첫 번째 피해자였다. 치료비를 주겠다고 사표를 받아간 뒤 유미씨가 백혈병이 재발해 치료비가 급했을 때 삼성은 약속을 깨고 500만원을 건넸다. 그랬던 삼성이 황상기가 시민사회를 만났던 것을 사찰을 통해 파악하자마자 반올림과의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10억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일은 그 이후로도 반복됐다. 치료가 급한, 생활비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은 반올림과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받는 건 반복됐다. 증언도 막았다. 삼성 사찰은 피해자를 넘어서 조력자에게도 이어졌다.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밝혀졌을 때 심적 고통은 작지 않다. 삼성의 더러운 귀와 눈으로 내 삶을 주변을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 그들이 훔쳐본 내용을 어떤 더러운 계획 속에 논의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할 수 없다. 삼성은 범죄내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꼼수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한다. 인정할 수 없다. 분명히 요

구한다. 피해자 가족, 조력자들 사찰했던 내용, 사찰했던 반올림 내용, 논의했던 내용을 반올림에 제공하라. 그것이 사찰피해자에게 삼성이 해야 할 첫번째 도리라 생각한다.”



###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8일 삼성은 자사 임직원들의 시민사회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당일 성명을 발표,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끔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 하였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는 명백한 불법사찰 범죄이다.

사과문 발표 이전에 각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려 애를 쓰던 삼성 측은, 사과문 발표 이후 돌변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이며, 그 어디에서도 “불법사찰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미안하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행태이다. 이는 삼성이 이번 사안을, 이재용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그저 '준법감시위가 활동하고 있고, 삼성이 그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척'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사실에 대한 사과조차 이재용 실형 면제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써먹으면서도 정작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는 삼성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삼성의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위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미전실 등 컨트롤 타워를 통해 자행되는 전사적 불법 사찰... 다른 이들이었으면 감옥에 가도 몇 번을 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몇 번을 매장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삼성도 이러한 상식적 정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총수에 대한 최종 책임 부과가 우리 사회에서 재벌들이 임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 반인권, 반노동 범죄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안을 밝힌다.

1. 삼성의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위 '불온단체'는 어떤 단체였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임직원을 감시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2. 불법 사찰 관련자 및 책임자를 밝히고, 삼성측은 이들에 대해 처벌해야 하며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해야 한다.
3. 불법 사찰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삼성의 불법 사찰 대상자인 임직원들에게 향후 조직 내에서의 인사 등에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4. 피해 임직원 및 피해 단체에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